

“지방의회 정수 확대 시범운영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사무 전북도 이양 가속화 예상 따라 김정수 도의원, 비례 8석 이상·특자도 대응 사무처 직급 개선 등 주장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사무의 도 이양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의회 정수 확대 시범운영과 의회사무처 조직 및 인력구조 현실화에 따른 2·3급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체 승진체계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주장은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가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에서다.



김정수 의원은 최근 복잡 다양해진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반영을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특별법특별 규정을 거론하며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4석)에서

100분의 20(8석) 이상으로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의 분화와 중간직급(3급) 신설을 통한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6급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5급 상당으로 시·군 7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임명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의원은 특별행정기관(지방국도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해

양수산청,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소관 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방향 설정에 따른 농생명고도화, 청정에너지규모화(수소·태양광·풍력·이차전지), 첨단소재융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등 각 분야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특례와 기업유치는 물론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재정분권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인 부지사 및 의회의 동기가 필요하고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13일 제주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전주시도의회 의정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부, 농촌 기본소득 지급을”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농민 생존권 보장·농업농촌 살리기 위해 필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3일 제주(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에서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급속한 개방화와 산업화에 밀려 농업은 차별받고 소외당해 왔다”며 “그 결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등 농업농촌 기반이 흔들리고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농정에 투입해 왔고, 두 해 전부터는 지자체마다 농가 단위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촌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농촌 지원과 별도로 농업을 공공재 또는 필수재로 인정, 이를 지키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

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항시적인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연천 청산면은 작년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매일 15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면 주민 7%가 증가했고 지역화폐 가맹점 역시 증가하는 등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농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은 농촌 주민 민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며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정 핵심과제”라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도, 올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 모집

전북도는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전통한옥을 보급하고 전북 고유의 전통한옥 계승 및 활용을 위해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지원내용은 도내에서 한옥 주택 신축시 최대 5,000만원,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을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시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신축개·재축 포함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의 융자금(연리 2%)도 지원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3일 김관영 도지사가 순창 구림체육관에 마련된 순창조합장 선거 투표소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분향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군 한옥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추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이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s://www.jonbuk.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주최·주관 없는 행사 안전관리 의무 추가

윤수봉 도의원 대표 발의 ‘육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육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도시사의 책무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고 500명 이상의 인



회의 신고의무, 안전점검 및 보완,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도 정비하였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처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자발적인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으로 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육외행사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또한 전북도는 도내에 가치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등록한옥 제도’도 운영한다.

‘등록한옥’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건축한 한옥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시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공사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옥’은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상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한옥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앞으로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을 위한 건축자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거시기장터 입주업체에 수수료 갑질 ‘들통’

박용근 도의원 ‘벤더사가 관리비 명목으로 금지된 수수료 6.2% 징수... 수년간 수익계약’

전북경제통합진흥원(이하 경진원)이 거시기장터(현 상생장터)를 운영하는 벤더사가 입주업체들로부터 금지된 판매수수료를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등 갑질을 해왔음에도 이 벤더사와 수년간 수익계약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박용근 전북도 의원은 13일 경진원이 제출한 ‘거시기장터 특별감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진원이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장터인 거시기장터를 운영하면서 수수료, 불법 수수료 징수는 물론 매출액을 부풀려 전북도에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송금 내역과 입주업체에 대한 정산내역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계좌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가 조사를 요구했으나, 해당 벤더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없이 덮었다.

그러하지 않았음에도 경진원은 수년간 이를 묵인해왔다.

특히 경진원은 자체 감사팀이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벤더사에게 경진원의 제출한 ‘거시기장터 특별감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진원이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장터인 거시기장터를 운영하면서 수수료, 불법 수수료 징수는 물론 매출액을 부풀려 전북도에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진원은 벤더사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지침과 달리 수년동안 수수료를 지급하고 달리 수년동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며 결국 경진원은 수년간 벤더사의 부당 이익을 묵인해 준 모습이다.

더욱이 경진원은 벤더사가 각 채널에 (업체를 대신해서)판매자로 직접 등록하여 자체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상품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경진원은 ‘입주업체의 판매 촉진을 위해 상품 판매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상품별로 단가대비 1~25.4%까지 차등 지원하는 등으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지원금을 쏟아주는 등 일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편중 지원도 해왔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진원은 2018년 11분기 나들이 및 프로모션’ 부문에서 ‘명가’의 제품에는 단가대비 지원금을 1%를 지원했으나 ‘더조은’ 제품에 대해서는 25.1%, ‘한샘유럽’ 제품에 대해서는 25.4%를 지원해 차등 지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경진원은 매월 전북도 농산유통과에 거시기장터 매출 보고를 하면서 2017년도에는 실매출액이 38여억원임에도 13여억원을 부풀려 50여억원으로 보고했고, 2018년도에는 17억원임, 2019년도에는 8억 여원 등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행패가 매출을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진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감사한 감사팀으로부터 벤더사 등의 자료 제출에 따라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고도 추가 감사팀이 마무리하고,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경징계처리했다. /김재훈 기자

경진원은 벤더사가 입주업체들로부터 수수료 징수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관리비 명목으로 약 6.2%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었으며 결국 경진원은 수년간 벤더사의 부당 이익을 묵인해 준 모습이다.

더욱이 경진원은 벤더사가 각 채널에 (업체를 대신해서)판매자로 직접 등록하여 자체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상품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경진원은 ‘입주업체의 판매 촉진을 위해 상품 판매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상품별로 단가대비 1~25.4%까지 차등 지원하는 등으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지원금을 쏟아주는 등 일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편중 지원도 해왔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진원은 2018년 11분기 나들이 및 프로모션’ 부문에서 ‘명가’의 제품에는 단가대비 지원금을 1%를 지원했으나 ‘더조은’ 제품에 대해서는 25.1%, ‘한샘유럽’ 제품에 대해서는 25.4%를 지원해 차등 지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경진원은 매월 전북도 농산유통과에 거시기장터 매출 보고를 하면서 2017년도에는 실매출액이 38여억원임에도 13여억원을 부풀려 50여억원으로 보고했고, 2018년도에는 17억원임, 2019년도에는 8억 여원 등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행패가 매출을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진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감사한 감사팀으로부터 벤더사 등의 자료 제출에 따라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고도 추가 감사팀이 마무리하고,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경징계처리했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상임위 현장정찰동

문건위,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찾아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및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을 찾아 주요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정찰활동을 펼쳤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을 찾은 문건위원들은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등 재단 주요현황 및 전북관광기념품지원센터 주요현황을 청취하였고, 도립미술관과 공동 기획 전시 중인 전북예술회관을 방문하여 전시작품을 관람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원에 재단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판매 중인 관광기념품과 내부를 시찰하였으며, 14개 시·군 협



이병도 위원장은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라북도 문화·예술 정책 방안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도내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환북위, 전북 901호 취항식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3일 군산 비응항에서 진행된 전라북도 해양청화선 ‘전북 901호’ 취항식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전북 901호’ 취항 과정 및 향후 수행 업무 등을 보고 받고 앞으로 전북 연안을 누비게 될 ‘전북 901호’를 직접 둘러보는 현지정찰활동을 펼쳤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전북 901호의 취항을 계기로 전라북도의 민관 공조형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환경복지위원회는 청정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901호’는 171톤(길이 37.4m, 너비 8m, 깊이 2.9m) 규모로, 하이브리드 추진기관을 탑재한 전라북도 최초의 친환경 관광선이다. /김재훈 기자